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변화와 한국의 입장”

김 우 상*

kws@yonsei.ac.kr

1. 머리말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한지 11년째 접어들었다. 1990년 9월 이래로 한국은 러시아와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돈독한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지난 10여년간 한-러 관계의 급진전은 러시아와 군사동맹관계에 있는 북한이 처했던 러시아와의 소원한 관계와 대비된다. 지난 10여년 동안 한-러간에는 여섯 번의 정상회담이 개최된 반면, 북한과 러시아간에는 고위 정부 당국자들간의 왕래가 전혀 없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1999년의 북한과 러시아간의 무역수지가 5천만 달러 정도에 불과한 반면, 한국과 러시아간의 무역수지는 22억3천만 달러에 달했다. 다시 말해, 지난 10여년간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은 북한보다 남한을 훨씬 더 선호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이 정치일선에 등장한 이래로 러시아의 외교정책 노선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의 對美정책 및 對 주변국 정책, 특히 러시아의 對 한반도 정책은 빠른 속도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의 변화 양상과 이러한 최근의 한-러관계의 변화가 한반도 안보구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2. 러시아의 對 한반도 등거리 외교와 경제협력

푸틴이 러시아 지도자로 등장하면서 러시아는 한반도 주변 국제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직을 수행한 이래로 약 1년 동안에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일련의 정상회담을 하였을 뿐 아니라 독일, 인도, 이란 등의 최고지도자들과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특히, 푸틴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의 급진전이 눈에 띈다.

〈표-1〉은 러시아와 남북한간의 협력 및 분쟁에 관한 행위를 중앙일보에 기사화된 사건 중심으로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1〉의 이벤트 데이터(event data)는 '분쟁과 평화 데이터 은행'(COPDAB) 데이터의 코딩 규칙에 따라 만들어졌다.¹⁾ 〈표-1〉에서, 푸틴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러시아가 남한에 대해 취한 행위(action)의 수는 14번에서 26번으로 급증하였지만, 남한의 러시아에 대한 행위 수는 별 차이가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COPDAB 데이터에 관해서는 Woosang Kim, "An Expected Utility Model of Regional Rivalry: A Case of North and South Korea," *Asian Perspective*, vol.15, no.2, Fall/Winter 1991, pp.125-148 참조.

없음을 알 수 있다. 푸틴이 지도자로 부상한 이후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행위 수도 5번에서 13번으로 급증하였다. 러시아의 이러한 행태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행위 수가 3번에서 10번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표-1>은 푸틴의 등장 이후 러시아와 북한간에는 관계 증진을 위한 상호간의 외교적 노력이 엇보이는데 반해, 한국과 러시아간에는 러시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반응이 민감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또한, <표-1>에서 푸틴 등장 이후 러시아는 남한에 대해 분쟁적인 행위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며, 그와 동시에 북한에 대한 협력적 행위의 수를 증대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對한반도 외교는 러시아의 정책이 남한 위주의 정책으로부터 “등거리 정책”(equidistant policy)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1999년 1월부터 2001년 5월까지의 주요 사건을 정리한 <표-2>는 지난 2년간 푸틴의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잘 보여준다.

<표-1> 협력과 분쟁에 관한 이벤트 데이터(Event Data)

	-1999	-2000 3.31.*	-2000 12.31.	-2001 5.15.
남한 ---협력적 행위---> 러시아	10	4	10	8
남한 ---분쟁적 행위---> 러시아	0	1	1	0
러시아 ---협력적 행위---> 남한	8	4	19	7
러시아 ---분쟁적 행위---> 남한	2	0	0	0
북한 ---협력적 행위---> 러시아	1	2	5	6
북한 ---분쟁적 행위---> 러시아	0	0	0	0
러시아 ---협력적 행위---> 북한	2	3	9	4
러시아 ---분쟁적 행위---> 북한	0	0	0	0

*2000.3.26. 푸틴이 대통령에 당선됨.

(출처: 중앙일보, 1999.1.1. - 2001.5.15.)

<표-2> 1999.1. - 2001.5. 주요 사건 정리

1999. 5. 28.	모스크바에서 김대중-엘친간의 한-러 정상회담
1999. 8. 10.	푸틴이 국무총리에 임명됨
1999. 9. 2.	러시아 국방장관 이고르 세르게예프의 서울 방문
2000. 1. 8.	한국 정부는 러시아 정부의 탈북자문제 처리에 강력한 유감 표명
2000. 2. 9.	러시아 외무장관 이고르 이바노프의 북한 방문: 1961년 조소우호조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우호조약 체결
2000. 3. 26.	푸틴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함 (5월 7일에 대통령에 취임)

- 2000. 5. 16. 조성태 국방장관의 러시아 방문
- 2000. 6. 4. 모스크바에서 클린턴과 푸틴간의 미-러 정상회담
- 2000. 6. 15. 평양에서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간의 남북정상회담
- 2000. 7. 5. 타지키스탄에서 중-러 정상회담
- 2000. 7. 17. 북경에서 중-러정상회담
- 2000. 7. 19. 평양에서 푸틴과 김정일 위원장간의 북-러 정상회담
- 2000. 9. 9.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담에서 한-러정상회담
- 2000. 10. 4. 인도에서 러-인도 정상회담
- 2000. 10. 25. 한국은 3척의 러시아산 킬로급 잠수함 구입을 백지화함
- 2001. 1. 8. 모스크바에서 푸틴과 슈뢰더간의 러-독 정상회담
- 2001. 1. 27. 한국정부는 러시아로부터 약 7억 달러의 무기를 구입할 계획 발표
- 2001. 2. 1. 러시아는 시베리아횡단철도와 경원선을 연결하는 계획에 관심을 표명함
- 2001. 2. 27. 서울에서 한-러정상회담
- 2001. 3. 12. 모스크바에서 러-이란정상회담
- 2001. 3. 25. 바이칼 호에서 푸틴과 모리간의 러-일 정상회담
- 2001. 4. 26.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 모스크바 방문

(출처: 중앙일보, 1999.1.1. - 2001.5.15.)

푸틴 러시아 정부의 對한반도 정책의 특징은 지난 10여년간 북한과의 소원했던 관계를 재정립하는 동시에 남한과의 우호적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등거리 외교라고 할 수 있다. 한-러 수교 이후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 증진 속도는 러시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²⁾ 한-러 수교 이후 남한 일변도 정책을 추진해온 러시아로서는 한-러간의 팔목할만한 경제협력 관계를 기대했을 것이다. 또한, 한반도 통일 및 북한 핵, 미사일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러 경제협력 수준은 러시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국들은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해결에 관해서 러시아에 어떠한 역할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였음에 틀림없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확보하고 있음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상실은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상실과 직결됨을 파악하게 된 것으로 예상된다. <표-1>에 나타난 러시아의 외교 행위로부터도 알 수 있듯이, 러시아는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되찾기 위해 푸틴이 등장한 이래 對한반도 등거리 외교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2000년 1월 8일 러시아 정부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국경을 넘은 일곱 명의 탈북자들을 중국으로 송환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 사건

2) 1999년의 한-러간 무역수지가 22억3천만 달러인데 반해, 한-중간의 무역수지는 10배가 넘는 225억5천만 달러에 달했다.

은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었다. 1개월 후 러시아의 이고르 이바노프 외상은 33명에 이르는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고위 당국자로서 북한을 방문하였으며, 러시아와 북한은 1961년에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우호조약을 체결하였다. 북-러간의 新우호조약에는 한국 정부가 끊임없이 요구해 온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삭제되긴 하였지만, "쌍방은 어느 일방에 전쟁 등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 또는 위기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각 접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³⁾ 7월에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였으며, 푸틴과 김정일 위원장은 미국 패권주의에 반대하며,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에 대한 반대와 미-러간 탄도요격미사일(ABM)협정의 준수 및 제2차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II)의 조속한 이행과 START III의 조속 체결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⁴⁾

이러한 일련의 러시아의 대북 우호적인 행위는 북한과의 관계를 새로이 정립하려는 러시아의 외교적 노력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푸틴은 한반도가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의 국가이익과 직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6자회담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푸틴이 최근 북한쪽으로 외교적 급선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남한과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래에서 언급한 러시아의 新외교정책 개념에서 잘 나타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러시아가 남한과의 경제협력에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남북한을 가로지르는 경원선과 연결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러시아는 정부차원에서 북한내 경원선의 현대화에 투자할 용의가 있음을 밝힐 정도로 경원선과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연결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⁵⁾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이르쿠츠크(Irkutsk) 가스전 지역으로부터 남한까지 천연가스를 공급하는데 북한을 직통하는 파이프라인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가스전 개발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은 나호드카(Nahodka) 지역의 공단 건설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중이다. 러시아, 일본, 미국과 함께 사할린 지역의 가스개발 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다.⁶⁾ 이에 대해, 푸틴은 남북한과 러시아의 삼각 경제협력 구도를 통하여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적 이익 추구 뿐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증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러시아의 외교적 노력은 아래에서 언급한 러시아의 新외교정책 개념에 포함된 국제적 경제협력과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보의 중요성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등거리 외교 노력에 반해, 한국 정부는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러시아의 對한반도 등거리 외교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였다. 푸틴이 북한을 방문하였을 때, 한국정부는 북-러 정상회담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내심 러시아와 북한의 밀월관계에 대해 경계의 눈빛을 보였다. 푸틴이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탄도요격미사일제한(ABM)협정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푸틴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소식통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러시아로부터 7억달러 상당의 무기를 구입하기로 하였

3) 『중앙일보』, 2000년 3월 3일.

4) 『중앙일보』, 2000년 7월 20일.

5) 『중앙일보』, 2001년 2월 13일.

6) 『중앙일보』, 2001년 2월 28일.

다는 것이다.⁷⁾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러시아가 한국보다 북한과 더 가까워질 것을 우려하여 취한 일련의 조치라고 해석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러시아의 안보정책 변화

러시아는 2000년 1월에 新“국가안보 개념”을 발표한데 이어 6월에는 新“외교정책 개념”을 발표하였다. 러시아는 새로운 국가안보 개념에서 먼저 미국의 패권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다극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 유엔 주도로 여러 나라가 함께 국제정치상황을 감시 및 감독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새로운 군사전략으로 핵무기의 ‘선제사용권’을 강조하였다. 러시아나 동맹국이 침략을 당하여 재래식 무기로는 러시아의 주권을 지키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침략국이나 연합세력에 대한 위기해결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체첸 분쟁과 같은 러시아의 주권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되는 국제적인 테러행위에 적극 대처해야하며, 이를 위한 “강성 러시아”를 강조하였다.⁸⁾

러시아의 新외교정책 개념에서도 러시아의 국익을 위협하는 미국 주도의 일극체제를 견제하기 위한 다극화된 국제질서 창출, 유엔의 역할 증대 및 국제법의 준수 등을 추구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 차원의 국제문제에 대한 개입보다 경제위기 극복 등 국내문제 해결을 위한 대외적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선진서방 8개국(G8), 유럽연합(EU) 등과의 긴밀한 협력과 국제경제로의 편입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新외교정책 개념에서 러시아는 다극화된 국제질서를 창출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천명하고 있으며, 유엔이 21세기 국제관계를 규제하는 주요 행위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엔 기구의 개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군축문제와 ABM협정과 관련하여, 이미 체결된 군축협정 및 조약의 준수와 국익에 부합되는 새로운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미국 등과의 핵무기 감축 협상의 지속적 추진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등 핵확산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금지를 위한 국제적인 참여와 미사일 및 미사일 제조기술의 확산 금지를 위해 러시아가 제안한 세계적 통제체제(global control system) 등 국제협력체의 출범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확대 문제에 관해서는, 1997년 5월에 체결한 기본협정(the Founding Act)의 이행, 즉 신규 가맹국에 대해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NATO군과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NATO의 유고 공습 등 NATO이외의 지역에서 인도주의라는 명목 하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동의없이 NATO의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NATO의 新전략개념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평화유지활동은 무력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언급하고, 러시아의 평화유

7) 『중앙일보』, 2001년 3월 2일.

8) 『중앙일보』, 2000년 1월 14일, 2000년 1월 17일, 편집부, “러시아의 국가안보 개념과 외교정책 개념의 분석 및 평가.” 『국제문제』 2001년 3월호, pp.55-64.

지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국제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외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경제발전을 위해서 G8 등 주요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 및 러시아의 세계시장경제로의 편입 및 체제전환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⁹⁾

그러나, 최근 부시 미국 행정부의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 천명은 러시아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 러시아는 新국가안보 개념과 新외교정책 개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미국의 패권체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고 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확보는 미국의 패권체제를 공고히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러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개발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더불어, 러시아는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를 개발할 경우 ABM협정이나 START II와 같은 협정들을 파기될지도 모른다고 미국의 부시정부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예브게니 아다모프 러시아 원자력부 장관은 CTBT와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CTBT와 NPT에서 탈퇴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다.¹⁰⁾

또한, 최근에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서 전쟁을 치른다는 세계방위 전략에서 탈피하여 주요 전략적 지역을 방위하는 지역방위 전략으로 전환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니콜라이 코르밀체프 러시아 지상군 사령관은 러시아군이 더 이상 세계 전체를 상대로 전쟁하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의 전투임무를 수행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¹¹⁾

4. 한-러 관계 변화에 대한 한국의 입장

사실,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제체제 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주변 안보 질서의 변화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한국과 러시아의 국내정치 및 경제 상황도 파악해야 한다. 먼저,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한 이래로 국제체제 질서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냉전 당시 미국과 소련이 경쟁하던 양극구도는 탈냉전 이후 미국과 중국의 경쟁구도로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대 초 엘친이 등장하면서 러시아는 일방적인 군비축소를 선언하면서 미국과의 군비경쟁을 포기하였다. 그 이후, 미국은 러시아보다는 중국의 잠재적 위협론을 앞세워 중국을 견제하는 일련의 외교적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클린턴 미국 정부의 對중국 인권외교 및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대한 견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부시 미국 정부의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이 중국의 잠재적 위협을 겨냥한 것이라는 사실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냉전 시기의 미-중 경쟁구도는 탈냉전 시기의 미-중 경쟁구도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부시 미국 정부는 국력의 우위에 바탕을 둔 '일방적 외교'(unilateral diplomacy)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72년에 미-러 간에 체결한 탄도요격미사일(ABM)협정을 파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을 천명하여, 對중국 및 對러시아 외교에 있어서 강성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9) 양승환, "새로운 세기의 한-러 관계." 『국제문제』, 2001년 3월호, pp.4-54. 위의 편집부 (2001) 참조.

10) 『중앙일보』, 2001년 3월 22일.

11) 『중앙일보』, 2001년 5월 9일.

러시아의 국내 사정도 어려운 상태다. 러시아는 고질적인 경제불황에 시달리고 있으며, 체첸 분쟁과 같은 전쟁에도 시달리고 있다. 한국의 국내정치 및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로 어렵다. 1997년에 닥친 재정위기로부터 국내경제는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김대중 정부는 임기 말기에 나타나는 권력 누수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시 미국 정부의 출범 이래로 남북한 관계도 별 진전이 없다.

이러한 국제적 및 한반도 주변 상황의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푸틴은 對한반도 등거리 외교정책과 러시아와 남북한간의 삼각 경제협력을 추진하여 한반도에서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영향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등거리 외교정책은 미국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최근, 한-러 정상회담시 한국은 1972년 미-러간에 체결된 ABM협정을 지지해달라는 러시아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러시아의 對한반도 등거리 외교가 북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해 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은 미국의 맹방으로서 부시 미국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외교정책인 미사일방어(MD) 체제를 지지하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결국, 한국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 직 전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요청을 받아들여 ABM협정이 준수되어야 함을 지지하는 외교적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현재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전쟁억지력을 제공받고 있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회박하게 만들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으며, 미국 역시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기를 희망한 바 있다. 다시 말해, 한-미 양국은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운송 수단의 발전으로 인한 세계화 과정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이익의 개념도 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활적인 국가이익은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군사안보에 치중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 수단의 발달로 인해 여론 조성이 쉬워졌고, 국민 개개인의 여론 조성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앞으로 국가이익의 개념이 영토와 주권 보호를 위한 군사안보 개념에서 국민 개개인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라는 인간안보 개념으로의 변화를 예상케 한다. 즉, 정치 지도자들은 국가안보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이 원하는 문제에 치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다수 국민들이 MD체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애매 모호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의 MD체제나 ABM협정에 대한 어떠한 명확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친중국 성향의 개인 및 집단이 늘고 있는 추세다. 또한, 미국의 정책에 대한 반감을 느끼는 개인 또는 집단이 늘고 있는 듯하다. 국력 우위를 바탕으로 하는 미국의 일방적 외교야말로 한국 내부에 이러한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부시 미국 정부는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하는 일방적 외교로 중국과 러시아를 몰아세워서는 안된다. 미사일 방어(MD) 문제든, 북한 핵 및 미사일 개발 문제든 간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몰아세워서 러시아-중국-북한이라는 북방 삼각 구도를 다시 등장하게 만들어 미국-일본-한국이라는 남방 삼각 구도와 경쟁하게 하는 체제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 미국의 對중국 강경책 및 對러시아 강경노선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 한국의 입장을 어렵게 하는 조치들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MD체제 구축에 대해 반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한국 국내여론과 한반도

주변 안보 사정을 미국에 전달할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나아가서는,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돈독한 한-미동맹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한국 국내에서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세력들을 유지하고, 중대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킬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등거리 외교정책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미국, 중국,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와의 경제적, 외교적 관계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